

평화통일에의 역사적 계기 마련 위해 남·북한당국 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을 제의

새해 국정연설

-자주·민족·민주국가로의 통일은 지상과제-

1981년 1월 12일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내리는 해가 되고 아울러 사회와 나라 전체에도 축복이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인은 국정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상히 말씀드리고 앞으로의 계획과 구상에 대해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먼저 정치분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상반기는 제5공화국정부가 공식으로 출범하는 시점입니다.

이미 본인이 여러 차례 공약한대로 새 공화국정부 출범을 위한 정치일정은 현재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두 가지의 중요한 정치일정은 바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선거는 이미 관계선거법이 확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각 정당과 후보들의 태세만 갖추어 진다면 언제라도 실시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정을 바라는 국민은 제5공화국 정부의 조속한 탄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반적인 국내정세는 안정을 회복했기 때문에 선거를 늦출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3개월 전 정치활동 허용을 규정한 새 헌법부칙의 정신에 부응하여 대통령선거의 실시는 이를 2월중에 앞당겨 완료할 작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국회의원선거도 원래 예정보다 한 두달 앞당겨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선거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계엄이 해제된 가운데서 실시될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본인이 여러 차례 밝혀 온 공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비상계엄을 대통령선거 실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늦어도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전까지 전면 해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는 두 차례 선거는 새 시대를 여는 상징으로서 공명정대한 가운데서 실시되어야 하겠습니다.

선거가 부정하고 타락한 여건 속에서 치루어질 때 선거의 도덕성과 정당성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몇 당선자의 자격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차원을 넘어서 제5공화국 자체의 도덕성과 정당성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명선거는 반드시 실시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정치활동이 재개되고 정당활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서 구정치적인 요소가 일부 재연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습이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특히 본인은 친정부적 자세의 정치단체일수록 공명선거에 있어 새 시대의 모범을 보이도록 배려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번엔 경제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일년 동안 우리 국가의 경제와 국민의 살림이 어려웠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으로서 나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들과 아픔을 같이 하면서 함께 의논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결의에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모든 난관이 단추 하나 누르는 것으로써 단번에 해결될 수 있는 형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오늘의 이 난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헤쳐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오늘 본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부탁의 말씀과 몇 가지 나의 생각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경제가 기필코 제2의 도약을 하게 되리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강인한 의지력과 자신감을 갖자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과 근원적인 문제를 파생시키면서도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정부, 기업, 근로자 등 전 국민들의 굳은 의지와 단합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 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의지력과 자신감의 유무야말로 또다시 내일의 경제의 도약과 후퇴를 가름하는 분수령 구실을 할 것으로 나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둘째, 안정이 경제발전의 기초임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같은 경제난국은 정치와 사회의 불안정이 경제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가를 응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한 번의 경험으로 족합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교훈을 우리는 두 번 다시 겪을 여력이 없습니다.

안정유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낙관을 해도 좋으리라는 점을 본인은 이 기회에 확실히 해두고자 합니다.

안정을 바라는 절대다수의 국민이 있고 안정을 지킬 결의에 차 있는 정부, 또 안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째로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하여 물가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경제의 착실한 전진에 있어서 인플레이는 더없이 깊은 함정입니다.

물가안정은 우리 상품의 수출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수출증대를 가져오고 이에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몇 해 동안 정부는 연초 때마다 물가억제선이란 걸 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의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물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누적시켰던 것으로 나는 기

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점에서 물가를 몇 %선에서 억제하겠다고 내세우기보다는 물가안정이 다른 모든 경제정책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써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분명하게 표시해 놓고자 합니다.

넷째로 경제는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기업의 체질이 강화될 뿐 아니라 창의력도 높아져서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저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주도 경제체제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모순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관주도형 경제가 단숨에 민간주도형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면서 그 전환에 필요한 과도기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국민 모두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난국타개를 위한 노력과 희생을 우리 모두가 분담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는 것입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희생을 나누어 부담함으로써 고통의 기간을 단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체감을 무기로 난국을 돌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어려운 부탁과 협조의 호소만을 나열했습니다만 이것은 모두 오늘의 경제난국을 딛고 일어나 제2의 도약을 향한 전진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좀더 인내하고 노력한다면 우리 경제는 금년 가을부터 세계 경기회복과 더불어 수출은 신속히 신장될 것이고 기업의 투자가 촉진되면서 공장의 가동과 생산, 그리고 고용도 늘어나 경제가 다시 지속적 성장의 본궤도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본인은 국민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정치와 사회의 안정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되찾아 내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전제조건입니다. 아울러 지속적 경제성장이야말로 국력을 축적해 주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안보를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을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계속 격상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에도 우리의 주목을 끄는 국제정세의 변화는 도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미국·일본·중공 등 3국의 지도세력교체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타나고 있어 이것이 우리 문제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일단의 관심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란」-「이라크」간의 전쟁과 중동산유국들의 잇따른 유가인상, 그리고 국제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선진공업국들의 보호무역정책 강화 등은 세계 모든 나라가 자국민의 국민감정과 이익을 위해 저마다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추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의 외교·국방정책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드릴 것은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안보와 발전의 여건을 남에게 의존하는 것은 오늘의 냉혹한 국제정치질서가 결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이 져야한다는 투철한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금의 세계 역사는 힘없는 민족이 영화를 누려 본 적이 없음을 웅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힘을 기르는 외교, 민족의 힘을 기르는 국방을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 튼튼히 함으로써 세계사의 조류에서 우리의 존재를 당당히 과시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원칙은 결코 동맹국과의 관계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여야 하겠습니다. 오히려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존재는 자주외교와 자주국방의 내실을 더욱 튼튼히 해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최대의 역점을 두고 이 문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미관계는 두 나라가 첫 우호조약을 체결한 지 한 세기를 맞이했습니다만 이같이 오랫동안 걸쳐 쌓아올린 돈독한 우의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맹방관계를 보다 성숙하고 밀도 있는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한·미간의 협력관계는 이제 단순한 군사동맹의 차원을 넘어 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앞으로 이와 같은 두 나라의 관계를 보다 확고하게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한·일간에 있어서도 보다 새로운 안목에서 상호협력관계가 정립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문화적 전통이나 경제관계 그리고 안보의 차원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미 맺고 있습니다.

우리 양국은 이제 불행했던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상호존중과 이해의 바탕 위에서 미래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명실상부한 인접우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을 비롯하여 모든 우방국들과의 관계를 상호이해와 상호주권의 존중에 입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럽」 제국 및 중동제국과의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대외관계를 폭넓게 다변화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밖에도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 상관없이 비동맹국가들은 물론 비적성 공산국가들과도 상호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는 여행자의 신변안전에 위험이 없는 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외국에 대해서도 여행의 자유에 제한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과거 모국방문이 금지되었던 일부 해외동포들도 조국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모든 해외동포들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가 일본식민지 통치로부터 광복을 찾은 지 36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오늘까지 전개된 남북분단의 36년사는 우리의 민족사에 있어 또 하나의 비극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족간의 전쟁, 민족이질화의 심화, 국제사회에서의 상쟁, 대화의 중단 등 그간 우리가 입은 민족적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한 민족, 한 언어, 한 문화의 조국이 하루 속히 단일의 자주·민족·민주국가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온 국민의 지상과제입니다.

가까이 지난 10여년을 돌이켜보면 1972년의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래 남북간에 개선된 것은 없고 쌍방간에 성명전과 일방적 제안만을 되풀이하면서 서로 말싸움으로 일관해 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실천의지의 바탕없이 물거품과 같은 형식적 합의가 아니라 단 한 가지의 합의라도 행동으로 입증하겠다는 쌍방의 결연한 의지인 것입니다.

74 공동성명에 담긴 여러 가지 약속을 위반하면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력적화로전선에 걸친 대남방송을 통해 비방을 격화시키고 있는 동시에 해외반한단체를 사주하여 정부 전복활동을 되풀이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철통 같은 안보태세와 국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국민의 투철한 국가보위 결의 앞에서 그들의 한반도 적화기도는 부질없는 도로에 그쳤습니다.

지난 36년간 각기 상이한 사상과 이념과 제도하에 분단되어 살아온 배달민족이 다시 뭉쳐 통일되느냐, 아니면 이대로 분단된 상태로 살아 가느냐의 관건은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상황에서의 통일의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북한당국에 대하여 획기적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과거 남·북한간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또한 여러 가지 수준에서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눈 바 있지만 상호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조금도 기여하지 못한 채 많은 시간과 물자와 정력만을 헛되이 소모하였으며, 남북총리회담의 절차 마련을 위한 작년의 실무접촉도 북한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킴으로써 남·북한간의 대화는 다시 끊어진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다 아는 바입니다.

남·북한이 통일에 이르는 길은 미사여구의 일방적 제안을 남발하거나 또는 지켜지지 않을 서면약속을 내놓는 데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지난날의 일들을 굳이 시비함이 없이 남·북한간의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결정적 계기를 마련하고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며 중단된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여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 가는 데 역사적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남·북한당국의 최고책임자가 변갈아 상호방문할 것을 엄숙히 제의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아무런 부담과 조건없이 서울을 방문하도록 초청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그가 서울에 체재하는 동안 일체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것이며, 서울과 다른 도시 및 농촌의 실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가 원하는 그 어느 장소라도 방문하는 데 모든 협조를 제공할 것입니다.

본인은 또한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북한을 방문하도록 그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북한을 방문할 용의가 있음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쌍방 당국의 최고책임자가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 동족간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고 남북대화를 재개하여 평화통일을 이룩할 목적으로 역사적인 방문을 교환한 후에 서로간의 이견을 좁히기 위하여 끈기있게 노력한다면 남·북간의 여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바탕 위에 실천 가능한 분야의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씩 합의해 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이 달성되는 날도 멀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또 한편 중요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로운 복지사회의 구현은 당면한 국정지표일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염원입니다.

국민 모두는 소질과 능력에 따라 경제와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야말로 정의사회건설의 기본 조건입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첫째, 공공투자를 더욱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주택·의료 등 국민생활의 기본수요에 대한 지출을 점차 늘려 나갈 것입니다.

셋째, 요즘의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민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생계보호책을 넓혀 나가고 취로사업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이들이 기본적으로 소득 능력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의료혜택을 받고자 하는 것은 전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료수준은 우선 양적으로도 이 염원을 충족시키기에 훨씬 부족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가능한 한 의료시설을 착실하게 확충해 나가는 한편 의료보호와 의료보험을 질적으로나 양적인 면에서 점차 확대 개선해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복지대책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일은 주택문제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인간생활의 기본요건은 의·식·주라고 합니다만 우리는 지난 10여년간의 경제성장으로 의·식의 기본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금년부터 공동투자를 늘려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주택을 대량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문제에 있어서는 기업인과 근로자가 모두 노사공존·공영체제의 확립이 산업발전과 국민화합의 기초임을 깨달아 상호 대화와 협조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기업단위 노조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물질적 복지의 점차적 실현과 함께 또 한편 정의와 질서, 법과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는 새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부정과 부패, 무질서와 비리가 시정되지 않는 한, 그 사회는 외형적 성장과 발전에 아랑곳 없이 내부적으로는 붕괴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준엄하고 어김없는 교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충격과 부작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회정화운동을 계속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소련에서 망명하여 미국에 정착한 「술제니친」은 얼마전 미국의 법치상주의와 자유를 병자한 방종을 개탄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있어 크고 작은 일 모두를 법에 호소하고 의존하는 나머지 전통적인 윤리의식은 각박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준법정신이 아직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도 못한 채 한편 전통적인 윤리의식은 급속히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근대적 법치주의와 우리의 전통적 윤리가 상호보완 하는 사회의 실현을 새 시대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정책에 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지난날의 그릇된 교육풍토를 시정하기 위한 교육정상화시책을 계속 강력히 추진하면서 새 시대 개척에 앞장 서 가는 건실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국민교육의 기본목표를 두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정신교육의 강화,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평생교육체제의 확립 등 3대 기본방향 아래 다각적인 시책을 펴나가겠습니다.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사상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공산주의의 이론적 허구성과 공산사회의 내부적 모순, 그리고 특히 북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적 추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과학기술교육을 대폭 강화하여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기술인력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옛말을 빌릴 것도 없이 급속히 변화 발전하는 현대 사회에서 남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끊임없이 자기완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가 어떤 계층, 어떤 년대의 사람에게도 교육을 받을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새해에 평생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여러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특히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취학전 아동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대학장학제도의 확충, 근로 청소년의 교육을 위한 지원, 심신장애자교육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제한요인 제거 등을 통해 가난하고 불우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기회의 확대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이상 말씀드린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제개편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교육여건의 개선, 그리고 교육내용의 향상과 교권확립을 위한 시책 등을 통하여 전인교육을 효율적으로 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80년대 문화정책의 기초를

첫째,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외국문화를 창달하며,

둘째,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 활동에 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고 또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두고 금년 중에 이를 위한 중장기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민족문화의 주체성 확립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시책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 아래 올해에는 전통문화예술의 계승과 현대화를 위한 각종 학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향토문화가 정착화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시대를 역사 속으로 흘려보내고 새로운 한 시대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시대에 있었던 갈등의 논리는 사라졌으며 갈등의 주역들도 무대의 전면에서 퇴장하였습니다.

이제야말로 상쟁의 낡은 폐습을 떨쳐버리고 국민총참여의 깃발 아래 너나 없이 손을 맞잡아야 하겠습니다.

대결에 소모되었던 정력은 건설을 위한 동력으로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일부 지식인·학생·청년층들이 가졌던 저항의식은 새 시대를 위한 창조적 정열로 승화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시대가 뿌려 놓은 씨를 거두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선을 취하고 악을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하겠습니다.

그 취사선택은 주인된 우리 모두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면서 창조해야 하는 새 역사-그것은 대통령인 본인을 포함하여

오늘날 우리 세대가 직면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이러한 숙명을 우리 모두의 힘으로 극복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소중히 여겨온 자유의 영광과 책임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